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국민들은 집권 2년이 되면 초기에 갖고 있던 새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접고 정부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45%로 김대중 전 대통령(49%)에 이어 2위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80%대의 높았던 지지가 40% 포인트가량 급락했다. 역대 대통령처럼 처음엔 화려했지만 중반에는 초라하게 전락하는 '시화종변'(始華終衰)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처럼 급락했을까? 치명적인 다섯 가지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5무(無) 늪에서 벗어나야 성공한다

첫째, 약속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의 되겠다"고 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층만 챙기고 반대층은 배제함으로써 통합과 공존의 길을 잃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탕평 인사 대신 코드 인사가 판을 쳤다. 둘째, 의욕만 있지 성과는 없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73조8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집행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했다.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37%나 줄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2%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한 반면, '잘한다'는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셋째, 적폐 청산만 있고 협치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이 이뤄진 다음,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면서 "살아 움직이는 적폐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야당과 보수 세력을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에 동조한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면 협치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대통령이 '선 적폐 청산 후 협치'를 주장하면 이는 정치를 포기하고 이를 맡기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럴 경우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심화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넷째, 자기 확산만 있고 책임은 없었다. 현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외롭고 공정한 자신들만이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잘못된 확산 속에서 '계도 민주주의'에 도취되어 있다. 더구나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노동의 법치 훼손 방지, 인사 검증 실패 등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편의주의적 정의'에 매몰돼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정의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관용을 들먹인다. 이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위선이다. 다섯째, 이념만 있고 실용은 없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좌파 이념에 치중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남아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성과가 없는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아 뜨거운 협치를 이루고, 내각과 집권당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청와대 중심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노선과 코드를 뛰어넘는 대타협 인사를 단행하고, 이념과 양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실리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대통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바꾸고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정책과 검증에 실패한 인사들에 대해선 추상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성과·실천·협치·책임·실용 등의 가치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5·18 광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과제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1980년 5월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다. 그날 광주에서는 평범한 학생, 시민들이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 5월 광주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이 불의한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그러나 실체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못했다. 독재 정권의 탄압과 은폐로 5·18의 가치가 왜곡되고 폄하됐으며, 진실은 감춰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정문회를 통해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의 편린이 드러났다.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많은 사람들 덕에 입법·행정·사법적으로 5·18의 의미와 가치가 정립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5·18의 진상은 가려져 있다. 최종 발표 명령권자는 누구인지, 실종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성폭력 문제, 헬기 발포 경위, 전두환의 광주 방문 여부 등 많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이와 관련한 기록이 새롭게 발굴되고 목격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철저히 투명하게 규명할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어렵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9월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조사 특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과 부적격자 추천으로 아직까지 표류 중이다. '5·18 진상조사 특위' 가동은 5·18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퍼즐이다. 한국당에서 20년 이상 군복무자도 포함되도록 조사 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5·18 진상규

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 속히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일부 극우 세력이 자행해 온 5·18에 대한 왜곡과 방방이 민의의 정당한 국회에 서까지 일어났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고,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 정권에 저항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천명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5·18을 왜곡·폄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젠 5·18을 왜곡·폄하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을 계기로 여야 의원 166인이 동의한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제출됐다. 진상조사위 가동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동시에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두 법안을 함께 처

리하는 것이 국회의 5·18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하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일일 것이다.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립 현충원에는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戰死)'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다. 작년 보존처 국정 감사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해 안장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충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보존처장과 전공심사 재심 권고 권한이 있는 인권위원 장에게도 계엄군 '전사' 처리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은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상식과 정의, 인권 위에 당당했던 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행위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社說

문화전당 활성화 정부가 적극 나서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현안들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문화전당장 공백 장기화, 전당장 직급 상향 등도 해묵은 과제다. 국가기관의 장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공식인 예는 그간 정부 조직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적인 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직급을 차관급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지역 여론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전당을 비롯해 광주 전역에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이를 감안해 광주시는 조성 사업 기간과 유효 기간을 각각 5년 늘린 2028년, 2013년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은 개관 5주년을 맞는 내년 4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에 따라 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 현행 정부 소속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는 체계에서 준

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 운영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문재부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위한 조직 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침체돼 있는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법인 등으로 변경하면 콘텐츠 창·제작 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선 '예산 매칭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커서 광주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명실상부한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 소외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해야

국내 경제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겪는 체감 경기는 한겨울을 방불케 할 정도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옛그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기업 CEO들 간 현장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 CEO들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광주시의 아쉬운 기업 지원 사례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들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주시의 기업 지원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지능화한 것이다. 이를 구축할 경우 생산성은 23% 증가하고 원가 절감률은 각각 16%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매출액은 5.3%, 영업이익은 23%, 고용은 6%씩 늘게 된

다. 이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전남도의 경우 나머지 사업비 50% 가운데 30%를,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20%를 지원해 기업들의 자부담률이 20~3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명품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시비로 10%를 지원할 뿐 일반 중소기업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남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목표 90개 기업 가운데 90%인 81개 기업이 신청을 한 반면 광주는 134개 목표 가운데 26%인 35개 업체만 신청했음을 보인다. 이를 보면 광주시의 중소기업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업 지원의 우선순위는 소외된 영세 중소기업이지 기업을 묶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소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無等鼓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머리 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모와 첫인상까지 좌우한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에도 머리 모양은 패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미는 삭발은 아름다움을 포기한 행위로, 결연한 의지의 표출 혹은 세속적인 삶의 결별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3수험생이나 재수생 그리고 고시생들은 머리는 물론 눈썹까지 삭발한 채 공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

결단의 상징이다. 출가인이 머리 모양에 신경을 쓰면 출가의 의지가 흐려져 번뇌가 자란다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번뇌가 한 번 생기면 순식간에 자란다는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번뇌초 또는 무명초(無明草)라고 불렀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불가에서는 여전히 승려로 입문하는 의식을 치를 때 삭발을 한다. 이후 자격을 제대로 갖춘 승려가 되면 다시 삭발식을 거행한다. 승려가 된 후에도 얼굴과 머리 모두를 깨끗하게 면도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행에 임한다. 서양에서도 중세에다. 공부에만 정진하겠다는 스스로의 각오이자, 주변에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표식인 셈이다. 그럼에도 어른의 삭발은 머리 맨살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승려를 제외하곤 보는 이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것도 사실이다. 삭발은 불교에서 승려가 출가할 때 세수를 버리고 불제자가 되는 마음을 표명하기 위한 의식이다.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우선 다른 종교의 출가 수행자와 구별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 번뇌를 끊기 위한

삭발

는 삭발이 성직자와 세속인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으며, 사제가 세속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고대 노예의 밀어 버린 머리를 모방한 것으로, 삭발은 신에 대한 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비윤과 수행을 위한 삭발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름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말일 터인데, 지켜볼 일이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종교칼럼

오월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헌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38년 전 1981년 5월 27일 광주 5·18 설교 테이프를 서재실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 당시 신학생이면서 나이가 24세였다. 서광주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때 어느 누구도 광주의 비극을 말할 수 없었다. 1주기 추도식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때 필자는 설교를 통해서 광주의 분노와 슬픔을 증언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 관점으로 연행되어서 공의회 심문을 받을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지금 진리 편에서 서서 광주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마땅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지만 그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심지어 조의를 표하는 검은 리본도 차고 다니지 못하는, 불의하고 악한 시대였다. 진실이 진실 되지 못하며 참말이 참말 되지 못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에게 진리 편에서 서서 주님의 음성

통금이 밤 9시로 단축되자마자 공수 부대원들은 귀가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무조건 두들겨 패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들까지 깨머리관으로 마구 때렸다. 그것은 '아벨'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필자는 당시 광주 민중 봉기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교를 했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이지만 오월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 민중 항쟁 정신은 이 시대의 근본 정신이다. 하지만 광주 정신을 폄하한 망언자들이 적지 않다. 5·18 민중 항쟁을 모독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과 온 국민은 분노에 떨었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불렀고,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주최했다가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다시 한번 한국당 망언 의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그로 인해 광주는 적폐 세력들에 의해 지금도 폄하되고 있다. 이 지역 의 목사가 강단에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무기기를 탈취하고, 도청에다 폭약을 쌓아 놓고, 교도소를 습격했다'며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설교했다가 5월 어머니들의 분노를 샀다. 정권을 탈취한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다. 헬리콥터 기총 소사라는 살육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정의로운 저항에 나섰다.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이 다가왔지만 오월 그날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은 여전히 쫓아내 버려진 날이다. 하지만 광주는 부활하며 다시 일어서는 봄이다. "봄빛 가득한 길가에/ 하늘의 쌀밥나 무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오월 꽃잎들은/ 속익 걸잎 쉬어/ 꽃무덤으로 덮여 있습니다"(홍시 '꽃만 봐도 서러운 그날' 중에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무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